

의안번호	제2833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8. 27.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3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제1항)
· “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→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
-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“성별”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도 포함시킴
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[복지지원과-27080호(2024. 7. 5.)] : 검토의견 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제4조제2항제2호	<input type="checkbox"/> 제4조제2항제2호에 성별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함	<input type="checkbox"/> 제4조제2항제2호에 성별 구분 항목 반영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136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6. 26. ~ 2024. 7. 16. 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”을“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지역·업종별”을 “성별, 지역·업종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</p> <p>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<u>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<u>지역·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	<p>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성별, 지역·업종별</u> -----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**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김 성 영

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